민주당 개혁특위 광주공청회 지상중계

"불가능한 야권 통합보다 선거연대로 가자"

민주계·열린우리계 갈등 잔존 큰 일
당원 다양화·지역 중심 당 운영 시급

20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개혁공청회에서는 공정한 공천제도와 계파간 갈등 조정, 중앙당 중심이 아닌 지역위원회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또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야권 통합보다는 진보가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의 광범위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계파 갈등 조정**=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민주당의 계파는 사람 중심이어서 폐쇄적이고, 독점적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당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 내 계파가 사람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당 내에서 계파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라며 "계파 간 갈등에 대해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은 "아직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가르는 사람이 있다"라며 "계파 간 갈등이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당원 중심 개혁을**=김영태 교수는 "민주당의 개혁 논의가 오늘 처음이 아닌 것처럼 그동안의 개혁 추진으로 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당원과 유권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개혁의 초점은 개방성에 있듯이 변신을 위한 아이디어보다는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힘껏 추진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개혁은 또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정이고, 당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당원 구조를 다양화하고 중앙당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 운영이 국민, 대중들과 소통하는 가장 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조호권 광주시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개혁은 당원과 국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당 개혁의 화두가 소통인 만큼 당원·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권통합 아닌 야권연대**=선학태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연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1대1 정치구도를 만드는 대통합이 성사될 경우 거대한 양당구도와 대통령제가 섞이면서 정치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합으로 집권하면 한쪽은 '날치기', 한쪽은 '장외투쟁'이라는 정치적 양극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적처럼 대통합 정당이 만들어져도 정당의 정체성을 일시에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시 쪼개질 수밖에 없어 민주·평화·복지를 지향하는 진보정책은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 교수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연합정치의 의제를 만들고,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도·대선 후보 결선투표제도 등에 대한 정치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부터 의제화해 이를 국민 앞에 선포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연합정치가 제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 한자리도 양보하지 못해 싹쓸이하고 있는 마당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야권이 통합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며 "불가능한 야권 통합보다는 정책·선거연대를 통해 민주세력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재천 변호사(전 국회의원) 사회로 이종걸 국회의원과 선학태 전남대교수, 김영태 목포대 교수, 전갑길 전 국회의원, 오승주 전남교육희망연대 공동대표,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호권 광주시의원, 정영덕 전남도의원, 양지현 광주 광산갑 대학생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우체국보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광주·전남 개혁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지도부 "충청권으로 가야"
광주·전남 과학벨트 유치 외면

당정협의 오락가락…시·도 공조도 미흡

광주·전남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 사업이 겉돌고 있다.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과학 벨트 유치와 관련, 전혀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뒤늦게나마 과학벨트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남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일부 전남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과학벨트 유치에 나서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권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는 등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연일 주장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당론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결정한 민주당 지도부도 광주·전남지역 과학벨트 유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21일로 예정된 광주시와의 당정협의를 취소하고 최고위원회의로 대체했다가 광주시와 광주 국회의원들이 강력 반발하자 다시 당정협의를 갖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광주시와의 당정협의에서 과학벨트 유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주선 최고위원은 "손 대표에게 '과학벨트 문제가 걸려 당정협의를 취소하겠다면 아예 광주에 내려오지 말라'고 말했다"며 "아무리 민감한 현안이라도 지역 민심과의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에서 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광주 국회의원 및 광주시가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광주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 유치 문제와 관련, 조만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조도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학벨트 유치에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공동보조를 취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당원 우선하는 상향식 공천 수용하라"

한나라 소장 모임 '민본 21' 간담회

한나라당 개혁성향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은 20일 당 지도부에 상향식 공천안의 적극적인 논의와 빠른 수용을 촉구했다.

민본21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상향식 공천개혁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나 최고위원이 내놓은 공천개혁안이 힘을 받게 됐다.

간담회 직후 공동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상향식 공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성식 의원은 "싸우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바꿔야 한다. 여야가 싸우는 이유가 바로 현행 공천제도 때문"이라며 "권력자 눈치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을 우선하는 게 과제"라며 개혁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지도부가 상향식 공천안을 뭉개려고 하면서, 정치개혁도 못하면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도부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권영진 의원은 "'공천 줄서기'는 또 다른 차원의 대가성 거래이자 뇌물"이라며 "국민과 당원은 공천개혁을 이룰 수준에 도달했는데 그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집단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참여경선제 실시에 따른 경선 후유증 최소화, 대선 후보의 영향력 차단 등 공천개혁안에 대한 보완 주문도 나왔다.

정태근 의원은 "대선 후보를 팔아 국회의원 후보경선을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대선 후보 지지의사 표명시 후보자격 박탈 등 대선 후보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용 의원은 "밀실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다 대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후보를 경선으로 뽑고 있고, 다음 수 순은 국회의원 후보"라며 "경선은 후보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나 최고위원은 특위 차원에서 공천개혁안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최종안을 내주 중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과학벨트 함구령속 논란 확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함구령'에도 불구,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논란이 당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은 "과학벨트는 공약대로 충청권으로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적합하다'는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공약대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며 "당내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재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맡겨달라"며 추가 논쟁을 제지했다.

그러나,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학벨트 입지에 대한 각종 의견이 쏟아졌다. 대부분 충청권 유치를 지지하는 발언들이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 공약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며 충청권 유치를 주장한 데 이어,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에 대해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남경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과학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혼란스러울 때 기본·원칙대로 가면 되며, 정치적 신뢰를 지키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